

에너지 절약 중앙-지방 “따로 없다”

지방자치단체별 ESCO 추진 ... 에너지절약 실천 프로그램 마련 분주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절약에 발벗고 나섰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ESCO 사업을 통해 산하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지역 내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힘쓰는 등 자체적인 에너지절약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에너지절약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으나, 최근들어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가 에너지절약에 관한 지역별 조례 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을 포함해, 일부 자치단체는 에너지절약 노력을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의 에너지절약 활동은 부산·광주 등 광역시와 경북·경남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행정자치부 선정 2000년 최우수 에너지절약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은 가로등 점멸기의 자동 조도제어장치 설치, 지역 산업체의 VA 참여 적극 유도, 대규모 공공시설의 ESCO 이용을 통한 에너지절약, 자체 에너지관리진단팀 운영, 쓰레기 매립장의 폐가스 이용, 경차 우선주차제 시행을 통한 경승용차 보급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확대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에너지절약 노력을 기울였다.

광주광역시시는 지역 공공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가로등 격등제 실시, 야간타이머 설치, 승강기 운행 자체 등을 실천해 지역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였다.

경상북도는 제주도에 이어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풍력발전 및 태양광이용 시설을 설치해 대체에너지 시설의 지역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절전형기기 우선 구매, 관용차 경차 구입 및 연료절감 추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에너지절약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자발적협약 체결현황(2001)

(단위: TOE, 100만원)

시·도	사업장수	사용량*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경 기	28	528,881	55,839	10,051	19,544
경 남	22	331,795	29,261	5,267	10,242
경 북	10	369,394	29,734	5,352	10,407
광 주	7	142,838	11,911	2,144	4,169
대 구	9	89,752	9,508	1,711	3,328
부 산	11	245,435	19,766	3,558	6,918
울 산	16	450,990	38,182	6,873	13,364
인 천	7	88,209	7,057	1,270	2,470
전 북	10	180,372	14,104	2,539	4,937
충 남	9	258,485	17,915	3,225	6,270
합 계	129	2,686,150	233,277	41,990	81,647

* 2000년 기준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0TOE 이상 사업장 중 3만TOE 이상은 산자부가 체결하고, 3만TOE 미만은 지방자치단

체가 체결

한편,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은 지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에너지절약지침(총리지시)」를 통해 지자체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별로 에너지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를 기관평가 대상으로 정해 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절약정보 및 기술자문, 통계자료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로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의 기반구축사업은 소요 사업비의 전액, 시범사업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에너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이 개발돼 상업성을 전제로 에너지절약 시설을 교체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 사업비의 10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에너지조례 재정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절약이 지역별로 활성화 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7>